

古下 宋鎮禹의 현실주의 정치노선

이철순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 정치적 현실주의자인 고하 송진우

고하 송진우 선생은 가인 김병로, 애산 이인과 더불어 일제 말기까지 국내에서 변절하거나 일제에 협력하지 않은 몇 안되는 정통 민족주의 우파세력의 뛰어난 지도자로 일단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고하가 처한 현실적 조건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투쟁한 지도자들도 높이 평가해야 하겠지만 그 자체가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의 악조건 속에서 변절하지 않고 자신의 지조를 지켰다는 점에서 고하 송진우 선생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고하는 주지하다시피 한말 위정척사파 계열의 성리학자인 기삼연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그의 부친인 송훈의 영향으로 구한말의 자강론에 근거한 실력양성론에 자신의 사상을 귀착시켰고 이에 기반하여 중앙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 대중계몽운동 등을 실행했다.

고하의 실력양성론은 국내의 합법적인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국내의 현실적인 권력이었던 총독부와 타협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의 작은 틈새에서나마 최선의 정책을 추구하려고 했던 유연하고 합리적이며 융통성 있는 정치적 현실주의자였으며, 무모한 명분에 치우쳐 일을 그르친 적이 거의 없었던 신중한 지도자였다. 그는 또한 식민지시대에는 엄혹한 일제의 권력과 직접 대면하고 해방 이후에는 외세가 진주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세를 판단을 해야 했고, 그의 예리한 정세판단은 대부분 적중했다. 이제 정세의 변화에 민감한 현실주의자로서의 고하 송진우의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자.

2. 고하의 논설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고하의 구체적인 행적을 살피기 전에 그의 예리한 정세분석이 잘 드러난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라는 논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925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동아일보에 12회에 걸쳐 연재된 이 논설에서 고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계대세의 조류는 확실히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 방향으로 이동하여 오는 것이 과거의 역사기록에 비추어 뚜렷한 사실이다”라고 전제하고, “만일 19세기를 불란서문화의 확충 시기라 하면, 20세기는 적색 러시아 사상의 발전시대라는 것이 정당한 견해일 것이다. 자본주의의 모범인 미국과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적색 러시아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서로 상대하여 발흥되는 것은 과연 멀지 않은 장래에 그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협조할까. 충돌할까. 이는 곧 태평양상의 일말의 의운(疑雲)이 되어 있는 것은 꾸밀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관찰한 다음, “세계대세의 운명이 이에서 결정될 것이며 또한 인류의 문화상 총결산이 이에서 판단될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바가 아닌가” 라고 매듭지었다.

이 논설은 한마디로 지금부터 80년 전인 1920년대에 이미 21세기 태평양 시대의 도래를 예언했으며 2차 대전 이후의 미소간의 충돌을 정확히 예측하였다. 동아일보 출신의 손세일 전 의원은 이 논설을 ‘예언자적 선견’을 보여주는 논설로서 “1920년대의 국제정치 안정기에 이미 2차대전 이후의 정황을 전망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3. 고하와 일제하의 자치론

고하는 1923년 가을부터 최린, 김성수, 신석우 등과 누차 회합하여 ‘유력한 민족단체’ 결성을 협의하여 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924년 1월 중순에는 천도교의 최린, 이종린, 동아일보의 김성수, 기독교의 이승훈, 평양의 조만식, 대구의 서상일, 그 외에 신석우, 안재홍 등 16, 17명의 모임을 주선하여 정치결사의 조직문제를 협의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고하 자신은 자신의 회고에서 경향 각처의 유지들이 한 번 모인 적은 있지만 자치문제를 논의한 적도 없고 합법적 정치운동체인 연정회라는 명명도 해본 일이 없다고 솔회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설사 자치론에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일제에 타협하고 투항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일제의 식민정책 변화와 자치제 실시에 따라 열리게 될 합법적 대중정치 공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의 정책변화에 따라 고하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첫째로 고하는 1924년 5월 일본 총선의 결과로 보다 유화적인 가토를 수반으로 하는 호헌3파 연립내각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총독부와 연계되어 자치론을 주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이전 시기의 총독부 정책은 내지연장주의, 참정권론의 입장에서 서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일본 본국에서도 변별 군부관료들이 내각에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타고난 정치가’였던 고하가 아무런 조건과 기반도 없이 무모하게 자치제 실시를 주장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둘째, 1925년 3월 가토내각은 보통선거법을 통과시키고 유화적인 외교정책을 전

개한다. 또 같은 해 7월을 전후하여 총독부 정책이 조선에서 자치제 실시를 조심스럽게 모색하게 된다. 보통선거의 연기라든가 군벌, 반동정치로의 회귀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고하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고하의 정치운동론은 분명 독립에 대한 열망은 포기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단계적인 독립론, 즉 독립을 차후의 과제로 두고 우선 자치제의 관철을 통해 정치적 자각과 훈련, 민중생활의 향상을 모색하는 독립론으로의 변화를 모색한다. 이에 따라 그의 정치적 중심 건설론은 자치에 대비한 합법적 정치단체 건설론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 총독부 자치정책과 동아일보 계열의 자치론의 비교**

총독부 자치정책: 대체적으로 민족독립운동 세력의 분열을 조장하고 총독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하에서의 자치의회(조선의회)의 결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동아일보 계열: 대체로 자치제 실시 관철을 통해 대중의 정치적 자각과 민족주의 세력의 정치적 결집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 결집된 힘으로 총독부와 일본정부에 한편으로는 압력을 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협을 하면서, 조선독립의 실내용을 단계적으로 쟁취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고하의 자치론이 총독부와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

고하는 동아일보에 “국제농민본부의 조선농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게재한 혐의로 1926년 11월에 구금된다. 이것은 고하의 자치론이 총독부의 자치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상징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최린은 1926년 10월 일본으로 건너가 직접 일본 정계를 상대로 자치제 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이것은 고하의 자치론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1927년 4월 헌정회 내각이 물러나고 육군대장 출신의 정우회 총재 다나카 내각이 성립된다. 다나카 내각은 종전의 대중국 유화정책을 비판하면서 강경한 대외정책을 주장하고, 그 결과 5월말에 제1차 중국 산둥출병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1927년 12월에는 유화적 식민정책을 취했던 사이토 총독이 경질되고 다나카의 측근인 야마나시 전 육군대신이 총독으로 부임해 오게 된다.

이러한 정세변화를 지켜보면서 고하는 자치제 실시가 불투명해졌으며, 따라서 이에 대비한 합법적 정치조직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그는 ‘민족적 총역량을 집중’시키고 민족운동의 지도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신간회 내에 있는 민족주의자들과 연합해야 하며, 신간회 내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실제로 신간회(1927년 2월 15일 결성)에 1928년 1월 경성지회를 통해 입회하게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하의 자치론은 일제와 타협하거나 투항한 결과물이 아니라, 현실 정세를 예리하게 분석한 후 합법공간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추구하고자 한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고하는 현실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행동한 정치적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일제말기 고하의 “대책무책론”

고하가 낭산 김준연에게 했다는 이 말은 일부 논자들이 얘기하듯이 일제말기에 고하가 무책임하게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전기에도 나와 있듯이 이 말은 “조선 민족을 위하여 그 독립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대책이며, 그러므로 이러한 명백한 대책은 우리 전체가 실현시켜야 할 계획인 까닭에 특별히 다른 계획은 없다”는 말이었다. 고하는 당시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칭병(稱病)하면서 사태를 용의주도하게 관망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 당시 상당수의 민족 지도자들이 변절했던 것이 현실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언술 자체가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하는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던 일제 말기의 상황에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희생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고하는 정보가 제한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세판단을 하고자 노력하면서 독립의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1944년 말 단파방송을 청취한 소오 설의식을 통해 카이로선언의 내용을 전해 듣기도 하고, 1945년 5월경에는 일본 외무성에 근무하던 장철수로부터 구미측 동향을 상세히 듣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측근들에게 일본의 항복이 몇 달 남지 않았다고 공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고하는 일제말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 무리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정세를 관망하면서 신중하게 처신한 현실주의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5. 고하의 건준 비참여

해방 당시 건준에는 안재홍 등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가담했고, 김병로와 이인 등 민족주의 세력도 초기에는 건준과 협력을 꾀했다. 8월 15일 해방 당일부터 여운형은 고하에게 직접 건준 참여를 요청했지만 고하는 이를 거절하고 사태의 추이를 관망했다. 해방된 지 이틀째인 8월 17일에 재차 건준 참여를 요청한 몽양에게 고하는 “내가 보기에는 몽양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오. 그러나 자칫하면 그들에게 휘감기어 공산주의자도 못되면서 공산주의자 노릇을 하게 될 위험성이 없지 않소. 내 말을 들으시오” 하면서 역시 거절했다.

고하가 이렇게 건준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소신이 없었다기보다는 현실주의자로서 국내외 정세에 대단히 민감한 그의 태도 때문이었다. 그는 앞에서 보았듯이

정세판단이 불투명할 때는 관망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신중하게 처신했다. 당시의 정세는 연합국의 한반도 처리 지침과 독립국가 건설의 전망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고하가 관망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고하는 자신이 여운형에게 한 말대로 건준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하여 인민공화국으로 변질된 9월 6일부터 정치활동의 전면에서 나서는 것을 좌파의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에 대하여 중경임시정부 절대지지, 민족역량 총집결을 위한 국민대회 개최를 주장하며 우파세력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9월 7일 결성된 ‘국민대회준비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고하의 당시 정세판단은 정확한 것이었다. 그의 말대로 건준은 공산주의자들에게 포획되어 좌익 일색의 인공으로 변질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정치세력의 결집체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건준에 참여하지 않고 신중하게 사태를 관망한 그의 태도는 현명한 것이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예리한 정세분석가로서의 고하의 면모를 볼 수 있다.

6. 미군정과의 협력관계

고하 송진우는 일제시대부터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정치체제에 대한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었고 사회주의사상과 정치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조선의 발전단계상 맞지 않는 것이라 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지도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정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인 미국의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 태도를 보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현실주의자인 고하가 볼 때 남한 내 유일한 권력으로 수립되어 있고, 독립국가 건설을 원조하겠다는 미군정을 배척하고 국가건설을 추진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신과 원칙의 지도자인 고하가 미군정의 정책을 그대로 대변하는 종속적인 존재로 전락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입장에서 미군정을 바라보고 있었고 자신의 판단 위에서 주도적으로 미군정에 협력하고 있었다.

일부 비판론자들이 남한의 일부세력들이 미군정과 야합하여 분단정권을 세우는데 일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회주의를 선택하거나 강요당한 2차대전 이후의 신생독립국가들이 대부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회귀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고하의 정치노선은 정당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7. 고하와 신탁통치 문제

고하는 중국이 독재체제인 군정을 거쳐 일종의 교도민주주의 체제인 훈정으로 넘어가고 이 단계를 거쳐 마침내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인 민정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손문의 민주주의 3단계 이론이 해방은 되었으나 군정 아래 놓여 있는 조선에도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내심 갖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정치훈련 이른바 ‘훈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이에 입각해서 미군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하에 비판적인 세력들은 고하의 훈정론을 찬탁으로 단정 짓고 비난하였지만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일단 사실관계로 볼 때 그는 12월 29일 국민대회준비회 위원장 이름으로 ‘최후까지 투쟁하자’라는 담화를 내고 반탁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가 모스크바 협의를 훈정론의 틀에서 긍정적으로 본 것은 사실이나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뜻은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고하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 고하는 당시 명분론에 집착하여 미군정을 정면으로 부인한 임시정부의 반탁론에 반대했다. 고하는 “미국은 여론의 나라이니만큼 국민운동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신탁통치안이 취소될 수 있고 (중략) 군정을 부인하고 임정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하면 반드시 큰 혼란이 일어날뿐더러, 결국은 공산당이 어부지리를 취할 우려가 있다”고 임정 측과 언쟁을 벌이면서 반탁의 방법론을 달리 했다.

고하는 모스크바3상 결정 이전부터 미국 국무부 주도의 한국에 대한 다자간 신탁통치 구상을 알고 있었고, 또한 미군정과 맥아더사령부가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막상 모스크바3상 결정이 전해졌을 때 그는 미군정을 적으로 돌리기보다는 미군정과 연합하여 국제적 여론의 환기를 통해 미국의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고하는 현실적인 권력이었던 미군정과 충돌하지 않고 모스크바 협정의 긍정적인 면을 살리면서 우리민족의 아킬레스건인 탁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고하가 무모한 명분론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정치현실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고하의 대안은 이후 정국의 추이를 볼 때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었지만 그의 죽음으로 실현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고하의 암살 이후 임정세력은 반탁주장으로 정국을 일시적으로 주도하였지만 이후 미군정의 지지를 상실하고 그들의 기피 세력이 되어 버렸고, 좌우의 정치세력은 찬탁세력과 반탁세력으로 나뉘어 통일을 보지 못하고 극렬한 명분 싸움에 시종일관하게 되었다. 우리의 민족지도자들은 명분에 치우쳐 통일정부라는 보다 큰 실리를 잃고 만 것이다.

8. 맺는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고하는 현실 정세변화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현실에서 가능한 정책을 모색했던 정치현실주의자였다. 그의 정세판단은 정확한 것이었고 그것에 근거한 그의 정치노선은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 옳은 것이었다. 특히 현실 사회주의의 거대한 실험이 실패로 끝난 것이 분명한 현 21세기에 자

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노선을 견지한 고하의 탁견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항상 현실에서 출발한 그의 노선이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가인 김병로의 1960년 10월 8일자 『동아일보』 회견을 음미하면서 해방정국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된 고하를 애도하고자 한다. 사람 평가에 있어서 엄격하기로 유명했던 가인은 당대의 정치인들을 평하면서 “고하 송진우가 간 뒤엔 사람이 없어. 지금 흥흥한 인심이 심상하지 않은데, 영웅은 필요 없지만 인재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라고 고하를 그리워했다. 가인의 말처럼 오늘의 어지러운 정치현실을 볼 때 고하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의 지혜가 더욱 간절하기만 하다.

이철순: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부회장.

현재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